

# 대법원 2025도151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○○시장인 피고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①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, 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됨

환송 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, 환송판결은 ② 부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음. 환송 후 원심은 ① 부분에 대하여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, ② 부분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음

대법원 3부(주심 대법관 엄상필)는, ① 부분에 대하여 확정력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룰 수 없고, 환송받은 법원도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, ② 부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사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보아,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,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함(대법원 2025. 4. 24. 선고 2025도1518 판결)

## 1. 사안의 개요: 공소사실의 요지

-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게시 관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

- 2022. 2.경 ○○시장인 피고인과 ○○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피고인의 개인 유튜브에 게시하고,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위 유튜브 채널을 홍보함
- 예비후보자 홍보물, 책자형 선거공보물 작성 관련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
- 2022. 5.경 ○○시의 2021년 고용률 및 실업률을 허위로 기재함
- ○○시의 2021년 고용현황은 전국 228개 자치구시군 중에서 고용률(63.8%)은 공동 86위, 실업률(2.4%)은 공동 111위였음
- 위 홍보물 및 공보물에는 “고용현황(※2021년 말 기준) 고용률 63.8%(전국 2위), 실업률 2.4%(전국 최저)”로 기재되어 있는데, ‘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’ 기준이라는 점이 누락됨

## 2. 소송경과

### 가. 제1심: 무죄

-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증거들은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
-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하여, 홍보물 및 공보물에 기재된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제작 및 보고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

### 나. 환송 전 원심: 유죄(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)

-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증거들은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,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○○시장 재선을 염두에 두고 제작·게시된 것이므로,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음
-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하여, 홍보물 및 공보물에 기재된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, 피고인이 해당 사실이 진실인지에 대하여 확인·조사할 의무

를 소홀히 한 이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,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음

#### 다. 환송판결: 파기환송

-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음
-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하여, 피고인이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

#### 라. 환송 후 원심: 일부 유죄(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), 일부 무죄

-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다룰 수 없음
-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하여, 홍보물 및 공보물에 기재된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제작 및 보고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

### 3. 대법원의 판단

#### 가. 쟁점

-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부분에 확정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
-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하여,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

#### 나. 판결 결과

- 쌍방 상고기각(원심 수긍)

#### 다. 판단 내용

- 검사의 상고이유(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)
  -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

▣ 피고인의 상고이유(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)

● 판단 기준이 되는 법리

-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룰 수 없고, 환송받은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.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

● 이 사건의 경우

- 원심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음. 따라서 환송 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